

*시험지 받자마자 해설지 씩니다.

*실전 풀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석서 아님

*교재 구매자들은 꼭 다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페 버전으로 보세요. 그게 퇴고한 거임)

일단 지문부터 빠개러 갑시다.

(가)

(1)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물적 성격[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 받았다.]

●대비(-지만)

대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 부분이 '~물적 성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때 #부분/전체 의 틀이 머릿속에 있는 학생들은 '부분적 인정'에서 <완벽하게 인정되지는 않았겠구나> 정도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2)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표상

명확하게 시기(조선 전기)와 양(노비의 수)가 떠서 시간을 x축, 노비의 수를 y축으로 잡고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떠올려봤 습니다. 이때, 여러 사정 이후에 등장하는 <양인과 노비의 신분격차>를 질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양/질 의 문제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열(여러 사정)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가 줄어든 여러가지 경로를 써주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개같이 실패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 었다.

●촉진

(2)에서 꽤 많은 생각을 해보려했지만 지우고 그냥, 양/질적 변화가 인식변화를 촉진한다는 관계 정도만 잡았습니다. 흥미 로운 것은 (3)에서 인식변화와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를 추상/구체로 나눠서 처리했습니다.

(4) 양반들은 수단[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목적[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 였다.

●수단/목적

설명생략

●명시적 구체화

(4)는 (3)의 말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해줬습니다. 이걸 느끼고 가면 꽤나 좋을지도.. 이때, #나열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보고 머릿속에서 <그럼 씨바껴 여러 개 나오겠네>하는거죠. 수업 때는 이걸 목적 의식에 취한다고 설명하 긴 했습니다.

(5) 시각¹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시각²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 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명시적 구체화

(4)에서 취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글을 대하면, 그저 넘버링 정도만 하게 됩니다. 깊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

다.

(6) **의의**[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한계**[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의의/한계

설명 생략.

(7) **의의**[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한계**[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구체화

(7)은 (6)의 구체화인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6)에서 잡았던 의의/한계 코드가 그대로 유지되죠. 이걸 수능적 접근에서 배운 이정표인 '대비'로 처리해도 좋지만, 사실 구체화를 느낀 상황에서 의의/한계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8)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 **이익**(李瀾)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분량 체크

내용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분량 체크를 해보면, (가) 지문의 절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지문의 나머지는 '이익'하나만 말해줄 확률이 높다는거죠. 그래서 이때 도망가도 됩니다. 정보처리가 힘든 분들은 중간에 탈주하고 지울 수 있는 선지 지우고 와도 됩니다.

●대비

'달리'를 통해, 양반들의 시각과 이익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표 사용에 익숙한 학생은 이전 양반들이 노비를 객체화했다는 것을 통해, 이익은 무언가 노비들을 주체화해주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9)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범주화

운명이라는 상위 범주 안에 '천명', '성명', '조명'의 하위 범주가 들어가네요. 만약 정보처리가 가능하다면, '천명'을 인간의 의도 개입 불가, '조명'을 인간의 의도 개입 가능으로 처리하고, '성명'을 뭐라해야 하지? 정도의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가능하면 천명도 의도 개입 불가능할 것 같아야 합니다.)

(10)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화

(9)의 내용이 (10)에서 구체화 됩니다. 참고로 (9)에서 개념의 용어 설명으로 그 하위 범주 사이의 역할을 추론했던 것은 보이면 좋고 안보이면 넘어가도 됩니다. (10)처럼 웬만하면 다시 써주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아무 생각도 안했습니다. (9)에서 이미 대충 생각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던거ですよ.

(11)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적용 대상 확대

'조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서 '조명'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 가능한 것입니다.1) 그러니 '노비'도 인간이 의도가 개입 가능한 무언가가 됩니다. 대충 주체성을 획득한 느낌이 나네요.

1) (9)에서 생각했습니다.

(12)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생략

(13)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과관계 vs 조건관계

(13)을 어떻게 처리하든 자유입니다. '어야'를 통해 필요조건으로 멋들어지게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여기서 그냥 동어반복 째름으로 생각하고 대충 읽었어요. 어차피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13)~(15) 부분을 날려서 대충 읽었습니다.

(14)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15)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제 (가)를 대충 읽었으면, 눈으로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은 해봅시다.

4번으로 갑시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가)는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를, (나)는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제시하였다.

시험지 받자마자 풀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장에서 '아니 비판한 놈이 하나 밖에 없는데 뭘소리여?'하면서 지웠습니다. 차이고 나발이고 존재 문제에서 걸려진다는거죠. 복수가 아닌데 어케 차이가 생겨요.

②(가)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험장에서 이 정도 째름한건 괜찮다고 봅니다. 뭔가 말은 되는데, 또 '불합리한 사회 문제점'이 (가)의 주제가 아닌 것 같고... 시험장에서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유기하고 다음 선지 보면 됩니다.

③(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냥 냄새가 나요. 보자마자 탁 치게 됩니다. 나중에 기출 분석 하시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개씨발 무조건 맞다 싶은 선지는 정답 후보군으로 둡니다. 보통 이런 애들이 답이에요.(아닌 경우도 많음)

따라서 쿨하게 4, 5번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5번입니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배층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다.

돌아가도 되는 선지입니다. (가) 지문의 무게는 이익의 사상에 있어요. 앞 부분에서 양반들 어찌고하는 정보를 물어보는 건 부가정보입니다.

돌아가서 보면,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가 있습니다. 이때 지문의 '충'이 선지의 '지배층의 이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

②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상화하였다.

선지 꼬라지 보자마자 바로 지우면 존나 좋습니다만 역시 돌아가도 됩니다.

이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바로 알 수 있죠. 저는 머릿속에 #주체/객체 의 틀이 있어서 '뭔 노비가 인식을 하노 ㅋㅋㅋ' 하면서 재깰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6번을 봅니다.

6. ㉠, ㉡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② ㉠은, ㉡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③ ㉠은, ㉡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 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④ ㉠은, ㉡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⑤ ㉠은, ㉡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염.... 도망가야 합니다... (가) 지문만 읽고 재끼기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스윽 봤는데... 7, 8번은 쉽지 않아 보여서 터치 안했습니다.

만만한 9번 패러 갑시다.

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우리 받은 오래도록 영원하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 ② 학교는 학생회에 기획부, 총무부, 체육부 등을 두고 있다.
 - ③ 그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
 - ④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 ⑤ 그의 판단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심= 마음

-a에 b를 두다 라는 문장 형식이 대충 비슷함

이라는 근거 2개를 가지고 4번 째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총 3문제 입니다.

이때, (나)를 읽기 전의 태도는 (가)와 조금 다르면 좋습니다.

현재 못 푼 문제는 4, 6, 7, 8입니다. (4번은 대충 풀어도 되니까 부담이 덜함)

이런 상황이 막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 지문을 읽을 때 힘을 세게 줘야 합니다.

(가) 지문을 읽을 때 마지막 날렸던 것처럼 보는 것은 지양합니다.

그럼 들어가봅시다.

(나)

(1)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추진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민권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켰다 정도로 잡고 가면 됩니다.

(2)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구체화

놀랍게도 (2)는 (1)의 구체화입니다. 아주 매끈하게 연결 가능해요. (1)의 [민권의 대한 논의] 가 (2)에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3) ㉠ 유길준은 ^{목적}[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수단}[민(民)]에 주목하였다.

●구체화

(1), (2), (3)이 연속적으로 구체화됩니다. 즉, (2)의 급진 개화파 라는 상위 범주 하에 유길준이라는 하위 범주가 들어가죠. 따라서 (3)의 문장을 보자마자 <어차피 연속적 구체화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고 아래 설명처럼 조건 관계를 짚고 가도 좋습니다.

●조건 관계

유길준의 이론을 필요조건을 활용하여 <근대 국가 달성> → <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단/목적 관계

생략

+ (3)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S1.포함관계를 떠올리며, 유길준을 급진개화파의 하위 범주라고 처리하기.

S2.조건관계를 떠올리며, <근대국가달성>을 충분조건으로, <민>을 필요조건으로 처리하기.

S3.수단/목적 관계를 떠올리며, <근대국가달성>을 목적으로 <민>을 수단으로 처리하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편한거 골라 잡으세요. (동시에 되면 좋음)

(4)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절대}[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상대}[인위적 권리]가 있고, ^{충분조건}[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필요조건}[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구체화

정말 기본이 쏙됩니다. (1)~(4)까지 전부 구체화됩니다.

- (1)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 (2)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 (3) **유길준**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民)**에 주목하였다.
- (4)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렇게 정보가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절대/상대

절대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천부 인권과 인위적 권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 관계

천부인권과 인위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대법의 제정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조건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보장(천부인권, 인위적 권리) → 근대법(시행, 제정)

(5)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대비(하지만)

좀 위험한 도박수였고, 저도 시험지를 다시 봐야 알겠지만 제가 시험볼 때, ‘하지만’은 추가적인 필요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써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 도식은 다음과 같이 재정립됩니다.

보장(천부인권, 인위적 권리) → 근대법(시행, 제정) and 교육

(좀 위험했습니다. 저도 저 도식을 떠올렸을 때,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듯)

(6) **박영효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國權)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범주관계

유길준 뒤에 바로 박영효가 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영효도 ‘급진 개화파’의 하위범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관계

박영효의 생각을 조건문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민권) → ~보장(국권)

이것도 다소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주권이 위태롭다는 말이 사실상 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으로 기호화했습니다.

(7)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건 관계

조건관계가 또 튀어나옵니다. 시험장에서선 연결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저 화살표만 짹짹 그어놨습니다.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네요.

-존재(민의 자유와 권리) → 법

-보호(민의 자유와 권리) → 법 준수

(8)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범주 관계

온건 개화파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앞서 잡았던 학자들의 범주가 잡힙니다. ‘개화파’ 안에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가 있는거죠. 뭔가 과거제, 개화 지문 느낌도 나네요.

●‘도’처리

보조사로 같은 위계로 나타내는 느낌으로 사용되건, 양보의 느낌으로 사용되건 대응되는 다른 항의 존재를 떠올려보긴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지하는 입장]/[정당하다고 주장] 정도를 양보로 연결한 느낌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무언가 노비에 옹호하는 느낌을 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노비를 옹호하지 않는 느낌을 낸다. 노비를 존중하는 정도를 나눠 서술해 준 것으로 ‘대비’라고 처리해도 무방하다.

(9) 민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일치

(8)과 (9)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일치 관계로 수능적 접근(문장편)에서 언급한 적 있죠.

(10)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대비(-지만)

-지만을 통해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다는 사실]과 [노비 잔존 문제, 사회적 차별 지속]이 대비됩니다. 만약 머릿속에 #형식/실질 의 틀이 있다면, 형식적으로 개선됐지만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범주 관계

‘개화파’ 범주 속에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가 있습니다. 필자는 초반부터 계속 나눠 써주다가 (10)에서 이 둘을 합쳐서 ‘개화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때 (11)에서 ‘독립 협회’가 등장한 것을 보아 ‘독립협회’는 ‘개화파’와 별도의 범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성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

다.

●‘도’처리

‘도’의 경우, 위계를 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도’를 보고, <그럼 다른 건 뭐였지?>하며, 앞 부분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위계를 가진 정보는 ‘임오군란 이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3)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¹⁾(조직)되어 ⁽²⁾(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성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³⁾(결합)하여 ⁽⁴⁾(본격화)되었고, 이후 ⁽⁵⁾(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⁵⁾(전국화)되었다.

●순서

제가 이 지문을 처음 읽다가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정보처리가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 언급합니다.

보통 순서는 과학 기술 지문에서 사용하지만, 이런 인문 지문에서도 정보처리가 안될 때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서술어 혹은 명사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순서를 잡아 주는 것입니다.

(14)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성격(1)}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성격(2)}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나열(이자)

운동의 성격을 제시해줍니다. 총 두 개가 나옵니다. 이때 독자는 #개인/집단 의 틀을 사용해서 이해해도 됩니다. 성격1에서 인권과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개인적이고, 성격2에서는 공동체 운동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해줬으니까요. 아니면 #이념/실리 의 틀을 사용해도 됩니다. 성격1에서의 존엄성과 평등 같은 것들은 뭔가 이념적이고 숭고해보인다만, 성격2에서는 이득이 되나마나의 문제 즉, 비지니스 얘기니까요. 어느 틀로 처리하든 상관 없습니다.

(15)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16)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구체화

만약 (14)에서 성격(1), (2)로 나뉘었다면, (15)와 (16)는 이렇게 나눈 성격들에 대한 구체화로 볼 수 있습니다. (15)는 뭔가 사회적 대우를 언급하고,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이득이 되는 문제를 말하는 느낌이 났거든요. 반면 (16)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이념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처리해도 됩니다. 필요조건으로 봐도 무방해요)

(17) 다른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18)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대비(하지만)

(17)은 형평 운동이 변질된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제시해준 반면 (18)은 형평 운동의 의의를 제시해줍니다. 이를 #의의/한계의 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러 갑시다.

아까 풀다가 때려친 4번의 3번 선지를 봅니다.

③(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개같이 참입니다.

기분 좋게 6번 패러 갑니다.

6. ㉠, ㉡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선지 판단을 위해 돌아가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판단할 때, ㉡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더 남으니까요)

저는 (나) 지문의 (4), (5)번 문장을 읽으면서 ‘필요조건 재정립’을 해봤습니다. 이런 탓인지 몰라도 기억에 좀 세게 남더라고요. 따라서 ㉡가 차별적인 것은 납득했습니다.

근데 ㉠부분은 생각이 좀 안났습니다. 이거 할 때 쯤에 (가) 내용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서 대충 속속 봅니다.

㉠ 주변 부를 이리저리 보던 중에, ‘이전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부분에서 존나게 평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1번 선지를 맞다고 박았습니다.

이제 7번 갑시다.

7. (나)의 ‘형평 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선지 판단의 풀이는 두 가지 입니다.

우선 저는 큰 범주로 풀었는데, 이 선지를 보자마자 시야가 ‘개인의 소양’ 쪽에 갑니다.²⁾ 기억 상 형평운동은 신분 차별을 철폐하려는 쪽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소양으로 달라지는 것을 비판하지 않죠. 이 풀이는 배경지식이 많이 개입된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내용일치 입니다. (나)지문 15번 문장에서 형평 운동을 하는 분들이 ‘소양’을 ‘사회적 대우’의 필요조건으로 언급했거든요. 헛갈리시면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②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너무 맞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해놔서 ‘어...좀 어.음..’하는 느낌이었어요.

우선 ‘형평 운동’이 백정의 차별과 관련된 것은 맨 처음에 형평운동이 등장할 때부터 나와 있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전개’도 (14)에서 #이념/실리 의 틀을 사용해서 처리했던 기억이 있어서 당연히 도움 되겠지.. 하면서 체크했습니다.

2) 제 책을 사셨거나 수업을 듣는 분들은 변량이 무엇인지 잘 알겁니다.

8번 갑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갑시다.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보기> 정보가 정말 파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볼 만한 것은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의 하위 범주가 ‘아리스토텔레스’인 점 정도 연결 가능하네요. 각자 다른 내용이라 생각하고 대충 훑어봐도 됩니다.

①<보기>의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나)의 김윤식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겠군.

아리스토텔레스는 보기에서 명시적으로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이라고 언급했고, 김윤식 역시 타고난 능력을 인정합니다.

전혀 무리 없이 지우죠.

②<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여기서 여차하면 틀립니다.

우선 박영효 문제는 넘깁시다. 그냥 내용일치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걸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기>의 주장입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박영효에 대한 내용을 빼고 선지를 좀 다듬어보겠습니다.

②<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은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이 선지를 #목적/수단의 틀을 사용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은 ^{목적}[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단}[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이렇게 보면, 2번 선지의 주장은 ‘인간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보고, ‘법의 뒷받침’을 수단으로 보는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를 보십시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적 공리’를 언급한걸 보면, 이 사상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가 ‘인간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배경지식이 있다면, 이 선지를 거짓으로 처리하고 쿨하게 틀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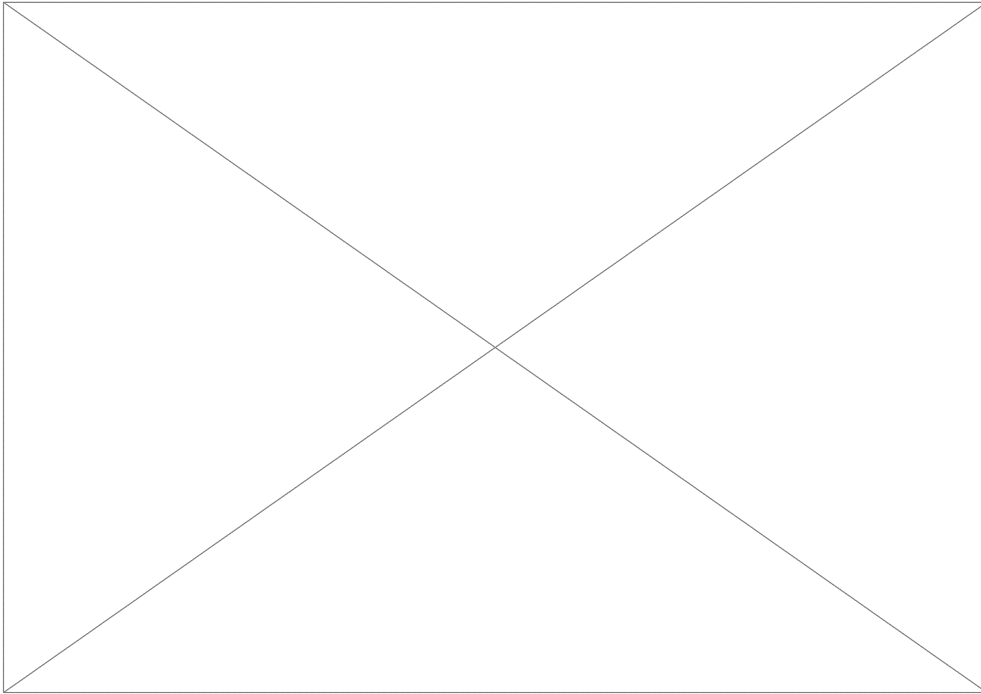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히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 수단: 근본 개혁
2. 목적(수단): 노예 해방
3. 목적: 사회 공리 극대화

이런 식으로 목적/수단 관계의 겹침관계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이런 형식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③<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겠군.

④<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이 두 선지는 그냥 대충 맞아요..

⑤<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의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정답 선지의 문장 자체도 좀 딱딱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 자체>는 <사회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관련 없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오히려 개인적 측면이죠.

오히려 <그들이 성취를 이루고 난 이후에 낸 목소리>가 이와 관련이 있겠죠.

이익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는 시험장에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익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쪽으로 언급하진 않죠.